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08
----------	------

발의연월일 : 2025. 1. 2.

발 의 자 : 박지혜·박정현·김성환  
황명선·민형배·위성곤  
이소영·이용우·조인철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27조의3(신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